

日本, 석유산업규제 대폭 완화

주유소 설치는 자유, 元賣會社도 5개그룹으로 집약화

日本은 석유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석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通産省의 자문기관인 석유심의회는 최근 석유산업의 재건·육성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을 보면, 석유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경쟁을 유도하고, 석유업계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온 휘발유 생산지도 폐지 (2) 정제설비 허가의 자동승인으로 사실상의 자유화 (3) 주유소 건설지도의 폐지등이 그 골자이다. 또 규제완화 조치에 따르는 업계의 도태등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새로운 체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유회사를 현재의 7개 그룹(11개회사)에서 5개 그룹으로 집약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日本석유정책은 지난 1962년에 제정된 석유업법을 통해 제품공급, 정제설비, 제품가격등 3개 측면에서 석유업계를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확보키 위해 덤핑판매등의 시장경쟁을 벌이는등 도리어 업계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제까지 보호육성책을 전환, 규제완화를 통해 정유공장의 시설능력 축소, 원매회사들의 제휴 및 합병을 촉구함으로써 업계의 체질 강화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규제완화의 주류는 (1) 석유공급 계획제도 (2) 정제업 허가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석유업법 내용들은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전면 자유화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을 보면, 우선 휘발유 생산지도의 폐지다. 등유나 경유에 비해서 휘발유는 유일하게 채산성 있는 유종이라는 측면에서 원매

각사는 점유율 쟁탈전을 벌이기 때문에 생산지도를 폐지하고 시장원리를 도입, 강력한 원매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현재의 정제능력은 약 480만b/d인데 비해 실제 가동률은 60%정도이므로 150만b/d 정도가 과잉상태이다. 이 잉여설비를 어떻게 축소하느냐가 업계 최대의 과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당경쟁방지를 목표로한 정제설비 신증설 허가제에서 자동승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자유화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휘발유 주유소의 건설지도는 한곳을 신설하면 다른곳을 폐지하는「스크랩 앤드 빌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앞으로 2년후에 폐지하여 자유경쟁을 시킴으로써 전국의 약 5,900개 주유소 가운데 상당수를 도태시킨다는 심산이다.

그리고 생산부문의 재정립에서는 판매시스템을 포함한 석유업계 재편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독점금지법상의 시장분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의 원매사 7개그룹을 5개그룹으로 집약시킬 방침이다. 원매회사로는 셸石油와 昭和·셸 석유로 발족, 大協石油와 丸善石油가 합병하여 코스모石油가 탄생했지만 그 재편성 속도가 느리므로 집약화를 더욱 촉진, 업계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일련의 조치가 5개년 계획으로 실현되면 제3차 석유위기등 긴급상태가 발생한다해도 충분히 견딜만한 석유안정 공급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通産省 자원에너지廳은 믿고 있다. □